SUMMA
Seoyoung Industrial Development / Seoyoung Engineering

경기신문 인천

kgnews.co.kr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단기 4357년 (음력 3월 18일)

대표전화 032)442-8114 제5700호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인천광역시

경찰도 못 믿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의 진화'

출동한 경찰 설득에도 '인지' 못 하고
"알았다" 하고 이동해 피해당한 경우도
인천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
게시물 탐지·차단으로 선제 대응 추진

지난 24일 오후 1시 38분쯤 미추홀구 연남로 한 은행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환대출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고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한 50대 여성 A씨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받은 대환대출 문자에 답하면서 자동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조종 악성 앱(APP)을 보여주며 경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하기 위해 기존 대출은행에 전화를 걸어 A씨와 직접 통화하게 하는 등 A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3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마침내 경찰은 A씨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시티즌 코난' 어플을 활용해 삭제하고 악성앱을 통해 이미 보이스피싱범에게로 빠져나갔을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계좌 정지와 신분증 재발급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또는 안내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묘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홀려 경찰이 출동해도 경찰의 말을 믿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일하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이제는 경찰도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경찰청도 두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인터넷 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피싱범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단의 차단·단속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조직 상선을 추적하는 단서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게시물 탐지·차단 조치 및 수사의뢰, 인천경찰청은 불법 유통조직 추적 수사 및 추가 차단 요청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해 피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수사체제를 개편해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피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등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형사기동대는 이번 협약의 연장선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을 피싱범죄 중점 대응 과제로 선정해 수사 및 범행 수단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함께 확산을 막아라" 연평도에서 펼쳐진 민·관·군·경 합동 소방 훈련 해병대 연평부대가 25일 연평주유소 일대에서 연평부대 소방반, 연평면사무소, 연평 119지역대, 연평파출소 등과 협조해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후 산불로 확산된 상황을 가정한 합동 소방훈련을 펼치고 있다. 해병대 연평부대 제공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예고
'I-패스' 환급 재정 부담 어쩌나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I-패스' 를 출시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국·시비가 투입되는 환급형 제도인 I-패스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시, 道·서울·코레일과 협의 진행 중

7월 검토… 정부 요청에 늦어질 듯
지자체 '인상 의지'에 동결 가능성 ↓
지원 대상도 6~18세까지 확대 예정
투입할 예산 늘 수밖에 없는 상황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400원이다. 150원이 인상되면 1550원으로 변경된다.

당초 인상 시기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에 들어가는 오는 7월로 검토됐는데, 최근 정부가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동 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대두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만큼 동결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해온 I-패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K-패스를 기반으로 환급률·연령층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I-패스가 시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다는 점이다.

I-패스는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급률은 이용계층별로 차이를 둬 일반인 20%, 청소년층 30%, 저소득층 53%다. 65세 이상 노인층은 올해 30%인데,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6~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올해 I-패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 190억 원에 달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환급률과 이용 대상까지 확대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I-패스가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부분은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14 인천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가속도'
15 30년 해역수호 완수한 '3001함' 에콰도르에 양여

현장 업무분장 혼선에 교실 부족… 늘봄학교 운영방식 개선 필요

명확한 가이드 없어 부장교사 몫으로
교실 내줘야하는 1학년 서둘러 하교도
교사노조 "준비 없이 밀어붙인 정책
오히려 정규반 학생들이 피해 입어"

늘봄교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운영상황이 방과후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일선학교 내 운영방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지원과 돌봄 유형 다양화를 통한 공백 없는 안정적 돌봄 지원을 목표로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수익자 부담인데 반해 늘봄학교는 무료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교 후 2시간 정도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방과후학교나 학원 등으로 지출될 사교육비가 줄어들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일선학교 현장 교사들은 현행 늘봄학교 운영 방식으로는 정부의 취지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인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올해 1년만이라면 어떻게 견뎌 보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안내심이 바닥나고 말 것"이라는 말로 현재의 상황을 딱 잘라 말했다.

현재 초2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에 따르면 늘봄교실전담사가 있고 수업도 전문강사가 하지만 그 뒤치다꺼리는 여전히 저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나 방과후교실 부장교사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A교사가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방과후교실 부장교사는 현행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늘봄교실에 우리애가 왜 입반이 안 됐냐는 학부모 민원부터 시작해 늘봄교실에서 발생하는 학폭 소환 및 강사들이 수업을 마치고 떠난 교실 청소까지 도맡아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봄교실전담사가 있지만 민원응대나 청소 등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모두 부장교사의 몫이 되는 식이다 보니, 부장교사 가까이에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동료 교사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도와줘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A교사는 "부장교사 부탁으로 일주일에 2번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하는데, 수업 중간에 '학원에 간다'거나 '엄마가 데리러 왔다'며 교실을 이탈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정부가 말하는 사교육비 절감과 돌봄공백 해소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부족한 교실이다.

하교가 빠른 1학년 등 저학년 교실을 내줘야 하는데, 교실을 내줘야 하는 1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늘봄교실 시간표에 쫓겨서 정작 정규반 아이들이 서둘러 밥을 먹도록 독려해야 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진다.

가뜩이나 챙길 것이 많은 어린 친구들임에도 서둘러 하교부터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음날 수업준비는 교무실에서 해야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정규반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며 "늘봄교실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 준비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2학기부터 전면도입되는 늘봄교실이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족한 교실과 업무 분장, 양질의 프로그램 등도 지역 내 대학과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 중이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